

# 일본과 중국의 최신 식품안전 정책 동향

2019. 11. 13.



글로벌정보부

# 목 차

조사 결과 요약 .....	1
I . 일본 .....	2
II . 중국 .....	8

## ☞ 일본

구분	내용
후생노동성	‘19년도는 전년 대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규격기준 책정이 강조된 경향이 있으며, ‘18년 6월 식품위생법 공포에 따른 HACCP 관련 추진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식품안전위원회	‘19년도에는 고유 업무인 리스크 평가 업무 외 전년대와 달리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연구 조사가 강화됨
소비자청	‘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식품표시제도 관련 검사법 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부분이 눈에 띈다
농림수산성	‘19년도 예산안도 식품안전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예산안이 과거 대비 크게 다르지 않으나 증액되는 경향이 있음
최신 이슈1	(식품위생법 개정) 2018년 6월 13일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등의 개정 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 및 검토·진행 중에 있음
최신 이슈2	(게놈편집 식품의 식품위생상 취급 검토)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상 취급에 대하여 검토하고, 취급요령 및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결정하여 공개함 (2019. 9. 19.). 이에 따라 게놈편집식품이 신고 혹은 안전성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유통 가능하게 됨.

## ☞ 중국

구분	내용
국무원	(‘19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내’) 식품 기준규격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이 강조됨 산업발전과 감독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식품안전 기초표준, 제품표준, 검사방법 표준 제·개정 농약 잔류 제한량 표준 1,000건, 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 100건의 제정과 돼지고기 수분 제한량 국가표준 개정 (제13차 5개년 국가식품안전계획 2016~2020년) 기준규격과 관련하여 ‘식품안전표준 개선’ 발전 목표 아래 주요 임무는 식품안전표준과 국제표준의 연계(조화) 가속화로 정함
최신 이슈	(조직개편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중국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 간 업무중복, 권한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3월 8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함 * 기존 농업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이 새로 출범함

\* 상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조사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외국 관계기관의 검토를 받은 사항은 아님.

\*\* 자료 작성일 기준은 2019년 8월 30일이나, 이후 일본의 게놈편집식품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함

## □ 식품안전 최신 주요 정책

○ '19년도 식품안전 관련 후생노동성 주요 정책<sup>1)</sup>

- '19년도에는 전년과 비교해 규격기준 측면에 있어서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에 수반된 규격기준 책정이 강조됨
- 또 '18년 6월 식품위생법 개정 공포에 따라 HACCP 관련 추진 정책이 확대됨

## &lt;'19년도 후생노동성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gt;

항목	내용
잔류농약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책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류 농약·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책정을 계획적으로 추진</li> <li>- 특히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규제에 대해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격기준을 책정하고, 기준의 적합·부적합을 확인하는 분석법 개발 추진</li> </ul>
HACCP의 제도화 등에 따른 적절하고 확실한 감시·지도 대책의 추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식품위생법으로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강습회와 순회 상담 등 도입 지원의 꼼꼼한 실시</li> <li>- 또 식품 등 사업자의 영업허가 신청 등에 대한 행정 절차 비용의 절감, 식품회수정보 일원화 관리 관점에서 2018년도부터 전자신청 등의 공통 기반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여 2019년도 후반부터 운용 개시</li> </ul>
검역소의 국경 대책 등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입국 추진에 대응한 검역 기능의 강화</li> <li>- 스트레스 프리하고 쾌적한 여행이 가능한 환경 정비</li> <li>- 수입식품의 적절한 감시지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체제 강화</li> <li>* 경제연계협정의 진전 등에 따라 앞으로도 해외에서의 수입 식품의 증가가 전망되는 점을 바탕으로 식품의 안전·안심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근거로 수입식품의 적절한 감시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하기 위한 체제 강화를 도모</li> </ul>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의견교환(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추진</li> <li>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소비자 등에게로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쌍방향 의견 교환을 실시</li> <li>- 식품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연구의 추진</li> <li>식중독 예방과 식품 중의 화학물질 등의 기준 설정, 검사법 등의 과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사연구를 추진</li> </ul>

1) 일본 후생노동성,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

(<https://www.mhlw.go.jp/wp/yosan/yosan/19syokanyosan/dl/01-02.pdf>)

○ '19년도 식품안전 관련 식품안전위원회 주요 정책2)

- 식품안전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리스크 평가 업무 외에 전년과 달리, 농약단속법 개정예 따른 농약의 재평가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개정예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 부분이 강화됨
- 또한 5백만엔의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건강식품에 관한 정보 발신(팸플릿, 연수회 등)의 강화가 신규 사업으로 설정됨

<'19년도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

항목	내용
식품건강영향평가 등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건강영향평가(리스크평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을 실시
식품의 리스크평가 관련 새로운 과제 등에의 대응에 필요한 평가 체제와 연구조사의 충실	농약단속법 개정예 따른 농약의 재평가제도의 도입, 식품위생법 개정예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신 동향과 과제에 대응한 리스크 평가,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일본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
건강식품에 관한 정보 발신의 강화	건강식품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팸플릿과 연수회 등의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알기 쉽게 정보 발신을 실시

○ '19년도 소비자청 주요 정책3)

- 전년도와 예산안 측면에서 크게 상이하지는 않으나, 2022년 4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신 가공식품 원료원산지 제도 관련 지속적인 대응과 식품표시제도 관련해 검사법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부분이 눈에 띈다

<'19년도 소비자청의 식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

항목	내용
가공식품의 새로운 원료원산지 표시 제도 보급·계몽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에 있어서 과제 중 하나인 가공식품의 새로운 원료원산지표시제도의 보급·계몽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실시
식품표시제도의 적정화를 위한 대응	식품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표시 감시에 필요한(유전자변형식품과 알레르기 물질 포함 식품) 검사법 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

2) 일본 내각부, '2019년도 예산(안) 개요'

([https://www.cao.go.jp/yosan/soshiki/h31/yosan\\_gai\\_h31.pdf](https://www.cao.go.jp/yosan/soshiki/h31/yosan_gai_h31.pdf))

3) 일본 소비자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https://www.caa.go.jp/policies/budget/pdf/policies\\_budget\\_181221\\_0002.pdf](https://www.caa.go.jp/policies/budget/pdf/policies_budget_181221_0002.pdf))

○ '19년도 농림수산업 주요 정책4)

- 농림수산업의 식품안전 관련 예산(식품의 안전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의 종합적인 추진 항목)은 전년도와 예산안 측면에서 항목은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약 4천만엔 증액됨
- 주요 추진 내용은 ①유해화학물질·미생물의 오염실태조사, 사업자와의 연계한 저감기술의 효과 검증, ②생산자재의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데이터 수집분석 및 리스크관리조치의 기초가 되는 시험법 개발 추진 등이 있음
- 정책 목표는 특정 유해화학물질·미생물의 섭취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억제,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제도 하에서 최신 과학적 식견에 근거해 생산자재의 안전과 품질 확보·공급임

<19년도 농림수산업의 '식품의 안전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의 종합적인 추진 항목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유해화학물질·미생물 리스크 관리 등 종합 대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을 통해 사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미생물에 대해서 식품 등의 함유·오염실태를 조사</li> <li>- 사람 건강에의 악영향이 걱정되는 유해화학물질·미생물에 대해서 사업자와 연계해서 실시 가능한 오염방지·저감대책의 책정·보급을 실시</li> </ul>
생산자재 안전 확보 종합 대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자재의 잔류기준치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시험 등을 실시</li> <li>- ①신기술 활용 동물용의약품 ②희소질병용 및 시장규모가 작은 가축용 동물용의약품 ③항균제의 사용기회 감소에 도움이 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개발 지원</li> </ul>

4) 일본 농림수산업성, '2019년도 농림수산업 예산 개산 결정의 개요'  
(<http://www.maff.go.jp/j/budget/31kettei.html>)

- 소비자기본계획공정표(2019년 7월 26일 개정)<sup>5)</sup> 중 식품안전 관련 주요 내용<sup>6)</sup>
- 2015년 3월 24일 각의 결정된 소비자기본계획에 근거한 소비자기본계획공정표에 의거하여, 각 부처는 시책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공정표는 이제까지 총 4번 개정됨
  - 2019년 7월 26일 개정이 가장 최근이며, 주요 항목별 최근 실적 등이 업데이트 됨
  - 지난 개정에서 내용 상 추가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 관리’ 항목에서 2018년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성분 등을 포함한 식품에 의한 건강 피해 정보의 수집, 식품의 자주회수보고제도의 창설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 개정법이 성립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였다고 언급됨
- <소비자기본계획공정표(2019년 7월 26일 개정) 중 식품안전 관련 주요 내용>

항목	관계 부처
식품안전에 관한 관계 부처의 연계 추진	소비자청,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리스크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에 관한 리스크관리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추진	소비자청,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후생노동성, 외무성
식품 중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소비자 이해 증진	소비자청, 관련 부처 등
농업생산공정관리(GAP)의 보급 추진	농림수산성
중소규모 식품 등 사업자의 HACCP 도입 촉진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식품의 이력추적 추진	농림수산성, 국세청, 소비자청
식품 관련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철저 촉진	농림수산성
식품위생 관련 사범 및 식품의 산지 등 위장 표시 사범의 단속 추진	경찰청
유통식품에의 독극물 혼입 사건에의 대응	경찰청, 관련 부처 등
폐기 식품의 부정 유통 사안	소비자청, 식품안전위원회, 경찰청,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5) 소비자기본계획(2015년3월24일 각의결정)에서는 소비자 환경 변화와 과제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책 추진 목표를 명확하게 한 후 소비자 정책을 추진 시 고려해야할 시점, 5년 간 노력해야할 시책의 내용, 계획의 효과적인 실시에 대해 정하고 있음. 이 중 계획의 효과적인 실시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소비자기본계획에 입각한 관계 부처가 강구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소비자기본계획의 대상 기간 중의 실시 예정인 것을 제시한 공정표를 소비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소비자정책 회의에서 책정하고 각 성청 등은 공정표에서 제시된 시책을 착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음.

6) 일본 소비자정책회의, ‘소비자기본계획 공정표(2015년 3월 24일 결정, 2019년 7월 26일 개정판)’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basic\\_plan/pdf/basic\\_plan\\_190729\\_0001.pdf](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olicy/basic_plan/pdf/basic_plan_190729_0001.pdf))

## □ 최신 식품안전 관련 이슈

### ○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sup>7)</sup>

- 2018년 6월 13일,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등의 개정 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 및 검토·진행 중에 있음

\* 사안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5년 이내 시행 예정임

- 개정의 취지는 ▲일본의 식(食)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국제화 등에 대응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적인 식중독 사안으로의 대책강화 ▲사업자에 의한 위생 관리 향상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정보 등의 파악과 대응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 ▲국제적으로 정합성 있는 식품용 기구 등의 위생 규제 정비 ▲실태 등에 따른 영업허가 신고 제도와 식품 회수 정보의 보고 제도 창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함임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6월13일 공포)의 개요>

항목	내용
광역적인 식중독 사안에의 대책 강화	정부와 도도부현 등이 광역적인 식중독 사안의 발생과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서로 연계와 협력을 함과 동시에 후생노동성 장관이 관계자로 구성되는 광역 연계 협의회를 설치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를 활용해 대응에 노력하기로 함
HACCP에 따른 위생관리 제도화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등 사업자에게 일반 위생 관리에 더해 HACCP에 따른 위생관리 실시를 요구함. 단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한 일정 영업자에 대해서는 취급 식품의 특성 등에 따른 위생관리를 하기로 함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에 의한 건강피해 정보의 수집	건강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행정으로의 건강 피해 정보의 신고를 요구함
국제정합적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위생규제 정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 사용 가능하게 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함
영업허가제도의 재검토, 영업신고제도의 창설	실태에 따른 영업허가 업종에의 재검토와 현행 영업허가업종(정령으로 정한 34개 업종)이외의 사업자 신고제를 창설함
식품리콜정보의 보고제도 창설	영업자가 자진 회수를 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구축함
기타	유제품·수산식품의 위생증명서 첨부 등의 수입요건화, 자치단체 등의 식품수출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 창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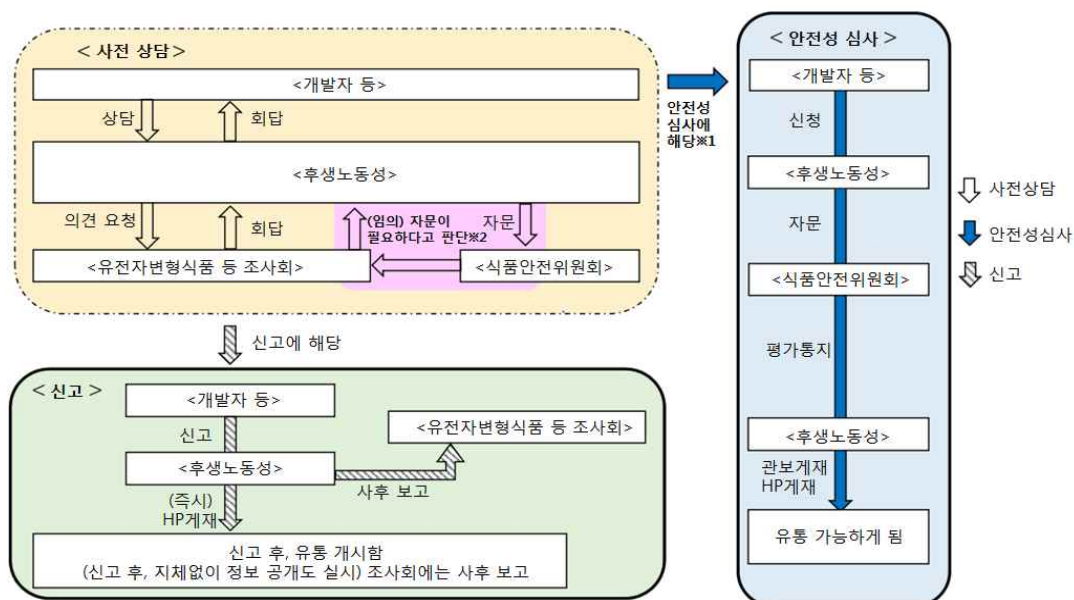
7) 일본,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6월13일 공포)'의 개요  
(<https://www.mhlw.go.jp/content/11131500/000345946.pdf>)



○ 일본 ‘게놈편집’ 식품의 식품위생상 취급 검토8)9)

- 후생노동성은 ‘게놈편집’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상 취급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2019년 9월 19일 취급요령 및 신고 관련 유의 사항을 결정하여 공개함
- ‘게놈편집’ 식품은 신고 혹은 안전성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외래 유전자가 잔존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 외래 유전자가 잔존하는 등의 경우는 안전성심사 절차가 필요함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취급요령 원문 참조 필요
- 신고 대상 ‘게놈편집’ 식품은 개발자 등이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 전 개발한 식품의 품목, 이용 방법 및 이용 목적, 게놈편집기술 방법 및 변형 내용 등 일정 정보를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의 일부를 후생노동성이 공표하는 구조임
- 동 결정에 따라 게놈편집 식품은 신고 혹은 안전성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유통 가능하게 됨
- 한편 소비자청에서는 게놈편집식품 표시 의무화에 대해 검토하였고, 외래 유전자가 잔존하지 않는 등의 신고의 경우 식품표시기준에 근거한 유전자변형표시제도의 대상 외라는 견해를 밝힘10)

<게놈편집기술응용식품의 취급 관련 흐름도>



※ 1 변형DNA기술응용식품으로서, '안전성심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200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33호를 준용  
 ※ 2 신식품 및 신기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취급 등에 대해서 신개발식품조사위원회에서 결정

- 8) 일본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신개발식품조사부회, ‘게놈편집기술을 이용해서 얻어진 식품 등의 식품위생 상의 취급에 대해서(2019년 3월 27일)  
<https://search.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186286>
- 9) 일본 후생노동성, ‘게놈편집기술응용식품 등’ 웹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bio/genomed/index\\_00012.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uu/shokuhin/bio/genomed/index_00012.html)
- 10) 일본 소비자청, ‘게놈편집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정보’ 웹페이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quality/genome/](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quality/genome/)

## □ 식품안전 최신 주요 정책

○ 2019년 식품안전 중점업무<sup>11)</sup>

-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매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배(安排)」를 발표하여, 한해의 주요 식품안전업무 분장 및 계획을 밝히고 있음
- '19년 5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21개 분야\*의 식품안전 중점업무를 명시한 「2019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배」를 각 지역 인민정부 등에 하달하여 집행토록 함

## \* 21개 분야

- |                           |                        |
|---------------------------|------------------------|
| 1) 식품안전 위험평가와 표준제정        | 12) 위법행위 관계자(책임자) 처벌   |
| 2)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저감과 산지환경정화 | 13) 식품생산기업의 주체적 책임 이행  |
| 3) 국산 영유아조제분유 품질 제고       | 14) 식용농산물 품질안전수준 제고    |
| 4) 학교식품안전 수호              | 15) 식품샘플검사 및 조사처리 강화   |
| 5) 농촌 가짜·저질식품 관리          | 16) 중점구역 식품안전리스크 예방    |
| 6) 외식 품질안전 제고             | 17) 식품생산·경영허가 심사절차 간소화 |
| 7) 보건식품 업계특별단속            | 18) 시장감독관리방식 혁신        |
| 8) 우수품질 식량 사업             | 19) 기술지원 및 정보화 구축 강화   |
| 9) 수입식품 안전리스크 예방          | 20) 선전 및 교육 강화         |
| 10) 식품안전시범도시 등 창건 추진      | 21) 식품안전책임제 시행         |
| 11) 법률·법규의 입법·개정·폐지 강화    |                        |

- 식품기준규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중점업무가 제시되었음
- 산업발전과 감독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식품안전 기초표준, 제품표준, 검사방법 표준 제·개정(국가위생건강위원회 담당)
- 농약 잔류 제한량 표준 1,000건, 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 100건의 제정과 돼지고기 수분 제한량 국가표준 개정(농업농촌부 담당)
- 밀, 밀가루, 대두 등 식량·유지작물(oilseed) 표준 제·개정(식량비축국 담당)

11)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안배'  
([http://gkml.samr.gov.cn/nsjg/spxsts/201906/t20190614\\_302403.html](http://gkml.samr.gov.cn/nsjg/spxsts/201906/t20190614_302403.html))

<주요 식품안전관리기관의 '19년 식품안전 중점업무 계획>

주요 업무	담당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조제분유 품질안전 이력추적체계 구축 범위 확대 (공업정보화부와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li>▶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기업 품질관리체계 점검 착수(3년 완료), 연내 총 점검수의 1/3 완수</li> <li>▶ 기업에 출시제품 품질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자발적 리스크 보고 촉구, 영유아조제분유 및 보조식품 생산기업 자가검사를 100% 달성</li> <li>▶ 학교식품안전 교장(원장)책임제 엄격히 시행, 학교 '오픈형 주방' 추진 및 '오픈형 주방' 비율 전년대비 향상 추진, 학교 관계자(책임자)와 학부모 급식배석제도 수립 등 (교육부와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li>▶ 외식업계 '오픈형 주방', 외식식품안전 리스크등급 관리 추진</li> <li>▶ 인터넷 판매 식품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오프라인 조사 강화</li> <li>▶ 보건식품 사기, 허위선전, 허위광고, 다단계 등 불법범죄행위 엄중 단속</li> <li>▶ 기업생산과정기록 검사강화, 원료입고, 생산과정통제, 출고검사, 운송 판매 전과정 관리, 이력체계 수립 (공업정보화부, 상무부와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li>▶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 미생물 오염, 중금속 잔류, 생물독소, 유기오염물 등 항목 샘플검사 확대(검사량 4건/1000명)</li> <li>▶ 식품생산·경영허가 심사절차 간소화</li> <li>▶ 보건식품 등록(注册)·비안(備案) 개혁 추진,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 방법 및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 관리 개선</li> </ul>	시장감독관리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표준관리제도 개선,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 구성</li> <li>▶ 산업발전 및 감독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식품안전 기초표준, 제품표준, 검사방법표준 제·개정</li> <li>▶ 식품안전국가표준 홍보 및 교육, 추적평가 강화</li> <li>▶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평가 강화, 부처간·지역간 리스크 모니터링 정보 공유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국과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ul>	위생건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잔류 제한량 표준 1,000건, 동물용의약품 잔류 표준 100건 제정</li> <li>▶ 돼지고기 수분 제한량 국가표준 개정</li> <li>▶ 농산물 생산기지, 산지운반차량, 임시양어장, 도축장 등 단계의 모니터링 및 샘플검사 강화</li> <li>▶ 가축·가금제품과 수산물의 환경오염물, 식량유지작물제품 생물독소 등 안전리스크평가 실시</li> <li>▶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장진입 엄격히 관리</li> <li>▶ 화학비료·농약·수산양식용 약품 사용저감, 동물용의약품 항생제 관리,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문제 해결 추진</li> </ul>	농업농촌부

주요 업무	담당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금알에 불법약품 사용, 소·양고기의 클렌부테롤류, 돼지도축 시약품 및 물 주입, 수산양식의 불법첨가 등 위법행위 중점 단속</li> <li>▶유제품 생산기업의 원유기지 건설 장려를 통한 영유아조제분유의 품질 및 경쟁력 제고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li>▶농촌지역과 도시-농촌결합지역을 중심으로 가짜식품, 저질식품 제조 판매 등 위법행위와 불법공장 엄격히 단속 (상무부,公安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과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li>▶「농산물품질안전법」, 「식량안전보장법」, 「식량유통관리조례」 등 제·개정 (사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발전개혁위원회, 식량비축국과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li>▶농산물표시제도 개선, 녹색·유기·지리적표시 농산물 발전 추진</li> <li>▶국가농산물품질안전이력추적정보플랫폼 보급 및 활용, 원산지 이력 추적제도 개선</li> <li>▶식용농산물 합격증 제도 마련, 산지반출-시장반입 연계 강화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식품 안전·안심 사업’ 지속 추진, 식품밀수의 대대적 단속으로 수입식품 안전리스크 예방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公安부, 시장감독관리국과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li> </ul>	해관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안전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li> <li>▶식품안전 클라우드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화</li> <li>▶‘인터넷+식품’ 감독관리 추진,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기술을 중점 활용하여 식품이력추적협력플랫폼 구축</li> </ul>	과학기술부, 농업농촌부, 공업정보화부, 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직책에 따라 분업 수행

○ 제13차 5개년 국가식품안전계획(2016~2020년)<sup>12)</sup>

- 2017년 2월, 중국 국무원은 식품안전전략을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업무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임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3차 5개년 국가식품안전계획(2016~2020년)」을 제정, 발표했음
-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식품안전관리능력, 식품안전수준, 식품산업발전수준,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요 발전목표\*와 11개 분야의 주요임무\*\*를 제시했음

**\* 발전목표**

- 1) 식품안전검사가 전체 식품유형과 품종을 포괄하도록 함
- 2) 농업분야 근원적 오염의 효과적 관리
- 3) 식품안전 현장검사 전면 강화
- 4) 식품안전표준 개선
- 5) 식품안전 감독관리 및 기술능력 제고

**\*\* 주요임무**

- 1) 기업의 주체적 책임 전면 이행
- 2) 식품안전표준과 국제표준의 연계(조화) 가속화
- 3) 법률·법규 제도 개선
- 4) 식용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원천 관리
- 5) (식품생산경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
- 6) 샘플검사 강화
- 7)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 8) 기술 능력 제고
- 9) 직업 검사원 인력 육성
- 10) 사회적 공동관리 국면 조속히 형성
- 11) 식품안전시범도시와 농산물품질안전현(縣) 창건 심화 추진

- 식품기준규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발전목표’와 ‘주요임무’가 제시되었음

**[발전목표] 식품안전표준 개선**

- ▶ 식품안전국가표준 300건 이상 제·개정
- ▶ 농약 잔류 제한량 지표 약 6600건, 동물용의약품 잔류 제한량 지표 약 270건 제·개정 및 평가
- ▶ 제품 표준에 농산물, 특수식이식품을 포함한 모든 일상소비식품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한량 표준에는 사용이 승인된 모든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련 농산물이 포함되도록 함
- ▶ 검사방법이 점차 모든 제한량 표준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12) 중국 중앙인민정부 ‘제13차 5개년 국가식품안전계획’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2/21/content\\_5169755.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2/21/content_5169755.htm))

**[주요임무] 식품안전표준과 국제표준의 연계(조화) 가속화**

- ▶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표준체계 수립
- ▶ 산업발전과 감독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식품기초표준, 제품표준, 검사방법표준, 생산 경영 위생규범 등 제·개정 가속화
- ▶ 중금속, 농약 잔류, 동물용의약품 잔류 등 식품안전표준 제·개정 가속화
- ▶ 국제표준 동향 파악 및 기존자원 재통합(조정)을 통해 국제식품규격 및 선진국 식품 안전표준, 기술법규를 포괄하는 DB구축, 국제식품안전표준 비교연구 실시
- ▶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
- ▶ 식품안전표준의 온라인공개·검색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든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기타 관련 표준 공포
- ▶ 샘플검사DB, 식품독성학DB를 재통합 구축하여 표준기초연구 수준 제고

○ '19년도 식품안전분야 주요 입법 계획

- 국무원의 주요 식품안전분야 입법 계획<sup>13)</sup>

입법 항목	제·개정	담당기관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개정	시장감독관리총국
「식량 유통 관리 조례」	개정	발전개혁위원회, 식량비축국
「돼지도축관리조례」	개정	농업농촌부

-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의 주요 식품안전분야 입법 계획<sup>14)</sup>

- 식품심사허가제도 개혁 추진

입법 항목	제·개정	담당부서
식품생산허가 관리 방법	개정	식품생산사
영유아조제식품 비안(備案) 관리 방법	제정	특수식품사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注册) 관리 방법	개정	특수식품사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록(注册) 관리 방법	개정	특수식품사

- 식품안전 감독관리 강화

입법 항목	제·개정	담당부서
냉장·냉동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제정	식품경영사
식염 품질안전 감독관리 방법	제정	식품생산사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개정	식품검사사
식품안전 감독조사 관리 방법	제정	식품생산사 등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	개정	식품생산사
식용농산물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 방법	개정	식품경영사
전람회(박람회)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제정	식품경영사

13) 중국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2019년 입법 업무 계획'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5/11/content\\_5390676.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5/11/content_5390676.htm))

14) 중국 중앙인민정부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입법 업무 계획'  
([http://www.gov.cn/xinwen/2019-02/05/content\\_5364002.htm](http://www.gov.cn/xinwen/2019-02/05/content_5364002.htm))

· 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

입법 항목	제·개정	담당부서
결합 소비품 회수 관리 규정	제정	품질발전국
제품 품질 감독조사 관리 방법	개정	품질감독사
제품 품질법	개정	품질감독사 등
식품관련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방법	제정	품질감독사

· 표준체계 강화

입법 항목	제·개정	담당부서
강제성 국가표준 관리 방법	개정	표준기술사
지방 표준화 관리 방법	개정	표준혁신사
국가 표준샘플 관리 방법	제정	표준기술사

-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주요 식품안전국가표준 제·개정 계획<sup>15)</sup>

구분	입법 항목	제·개정
식품제품 (2건)	우유 단백질	제정
	발효주 및 그 조제주(GB 2758-2012)	개정
식품첨가물 품질 규격 (10건)	식품첨가물 β-카로틴(GB 8821-2011)	개정
	식품첨가물 니신(GB 1886.231-2016)	개정
	식품첨가물 엽화소(GB 26405-2011) 등	개정
식품관련제품 (1건)	식품접촉용 규소고무(실리콘) 재료 및 제품	제정
생산경영규범 (7건)	식품생산 통용 위생 규범(GB 14881-2013)	개정
	과즙(주스) 중 파툴린 예방 및 저감 취급 규범	제정
	통(병)조림 식품 중 주석 오염 통제 규범	제정
	포도주, 커피, 코코아 중 오크라톡신A 오염 통제 규범	제정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오염 통제 규범	제정
	술 중 에틸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 오염 통제 규범	제정
	식품 중 납 오염 통제 규범	제정
검사방법 및 규정 (37건)	화학분석방법 검증과 확인 통칙	제정
	미생물학 방법 검증과 확인 통칙	제정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방법 검증과 확인 통칙	제정
	식품 중 카드뮴의 측정(GB 5009.15-2014)	개정
	식품 중 크롬의 측정(GB 5009.123-2014) 등	개정

15)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공청, 2019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 입안 계획 하달에 관한 통지’  
(<http://www.nhc.gov.cn/cms-search/xxgk/getManuscriptXxgk.htm?id=3ec712fcfb544c31a6eaa0d23294ce6a>)

## □ 최신 식품안전 관련 이슈

### ○ 중국 조직개편 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sup>16)</sup>

- 중국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 간 업무중복, 권한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3월 8차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음
-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농업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등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이 새로 출범하였음
- 특히,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 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식약총국, 질검총국 등의 업무를 모두 통합하여 강력한 시장감독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됨

식품안전관리 업무 구분에 따른 중국 식품안전관리 조직개편 전후 비교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농산물 안전 관리 (재배, 양식 단계)	농업부 [폐지]	➔	농업농촌부 [신설]
식품 안전 관리 (식품생산-유통-소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폐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수입식품 안전 관리 (통관 단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폐지]	➔	해관총서 [업무확대]
식품기준규격 제정·공포, 위험평가 실시 등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폐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설]

16) 식품안전정보원 '중국 정부조직 개편('18.3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jsessionid=ep2lhwpkzdmSEMQK6P8HYWE4JLWMF1UC4CBqaYhX3Qg2ClveyU1g5CeEqpVGOfY1.WIN-7PNJ25G5HEA\\_servlet\\_engine1?nttId=209505&bbsId=10000000000000000494&goMenuNo=9000001474&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jsessionid=ep2lhwpkzdmSEMQK6P8HYWE4JLWMF1UC4CBqaYhX3Qg2ClveyU1g5CeEqpVGOfY1.WIN-7PNJ25G5HEA_servlet_engine1?nttId=209505&bbsId=10000000000000000494&goMenuNo=9000001474&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